

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

2024. 4.

복지문화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4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종길 의원 등 7명
- 발의일자: 2024. 4. 5.(금)
- 회부일자: 2024. 4. 5.(금)
- 검토기간: 2024. 4. 8.(월) ~ 4. 12.(금)

2. 제정이유

-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에서 안 제3조)
- 나. 달서구청사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하고,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
- 라. 모유수유시설 설치·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마.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3과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세계보건기구(WHO)와 미국소아과학협회(AAP)는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수유하는 ‘완전 모유수유’를 권장하는 등 모유수유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으나,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6개월 완전 모유수유 비율은 18.3%로 국제 평균 38%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, 6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도 2012년 65.9%에서 2020년 33.6%로 급감함.
-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17년)은 “모유수유 실천 관련 사회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” 보고서를 통해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‘직장과 같은 공공장소의 수유실 설치’라고 하고 있어 모유수유 시설 설치·운영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
- 2018년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모유수유시설 설치·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있으며
-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·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또한 형성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정책적 필요성과 상위법령 등을 살펴볼 때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모자보건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3(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·홍보·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,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제8조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.